

# 철도 파업 나흘째, 시민들만 '발만 동동'

### 철도노조, 14일부터 오늘까지 파업 중 서울역·고속터미널 찾은 시민들 혼란 “언니 부고에 부산” “어머니 수술하셔” “KTX 2~3시간 갈 거리를 버스로 4시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17일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느라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9시에 뉴시스가 찾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 내에선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지연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열차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곳곳에는 빨간 글씨로 ‘운행 중지’ 알람이 떴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박순주(68)씨는 갑작스런 언니의 장례식에 가려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표를 구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박씨는 “어제 급하게 언니의 부고를 듣게 돼 너무 행망하고 슬프다”며 “마음은 부산에 이미 가 있는데, 서울에 계속 발이 묶여 있으니 심적으로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군복무 중인 김모(23) 일병도 “오늘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셔서 빨리 내려가야 하는데 답답하다”며 “본가가 경북 영주라 시간도 오

래 걸리는데, 파업으로 피해를 보니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지방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했다.

고모(36)씨는 친구들과 여수까지 타고 갈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휴가를 써서 친구들과 어렵게 마련한 여행 계획이었는데, 시작부터 어그르였다”고 불만을 표했다.

경부영동선 출발 지점인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철도 파업으로 기차 대신 고속버스를 타러 온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었다.

경남 창원으로 향한다는 직장인 한모(36)씨는 “KTX를 타면 2-3시간이면 가는데, 버스 타면 4시간 걸린다”며 “하지만 기차가 다 매진이라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예매했다”고 전했다.

경북 안동시에서 올라왔다는 최모(73)씨도 “오전 7시 기차 이후에는 전부 매진이거나 입석도 없었다”며 “그다음 이용 가능한 열차는 오후 9시30분 차라서 새벽같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이들은 KTX와 SRT의 고속철도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제 폐지,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 철도노조는 남영역 사거리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완도해경, “복원성을 사수하라”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어선전복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을 저해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순천경찰, 협력단체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별랑파출소(소장 박만철)에서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에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만연하고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발 벗고 나서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 금산파출소, 이상동기 범죄 대응 위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 금산파출소에서는 최근 다중밀집지역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범죄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담양경찰서 학교폭력·소년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담양경찰서(총경 박송희)는 2학기를 맞아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함께 22일까지 12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담양=박송희기자



### 강진소방,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15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강진역객버스터미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양소방, 2023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지난 15일 금호동 포스코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광양시 긴급구조통합대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 ‘성범죄 선수는 재판 갔는데 대회 출전?’ 광주 북구 검도부 허위보고도

### 성범죄 1년 넘게 몰랐던 선수 재판 출석일엔 ‘훈련, 대회 출전’ 기제

광주 북구정 직장운동경기부(실업 검도부) 코치진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선수가 재판 출석하는 날마다, 훈련 또는 대회에 참여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리 책임자인 감독 등은 ‘소속 선수들의 잇단 성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묵인 등의 혹은 여전히 무성하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실업 검도부 특정 감사에서 감독·코치의 선수 관리 감독 소홀·허위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북구 검도부 선수 신분이던 올해 4월 5일, 5월 19일, 6월 2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범죄 형사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감독·코치가 구청에 보고하는 훈련 일지에는 A씨가 4월과 5월 열린 재판 당일 훈련 또는 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쓰여 있었다.

훈련 일지에는 ▲4월 5일 훈련 참석(영주체육관) ▲5월 19일 대회 출전(천안·대통령기 전국검도선수권대회)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대회는 A씨가 개인 사정을 들면서 따로 합류하겠다고 둘러대며, 재판 당일을 비롯한 이를 동안 출전하지 않았지만 일지에는 출전한 것처럼 돼 있었다.

구청 감사담당관실은 A씨의 법원 출석 일시 등과 대조해볼 때 해당 날짜 훈련 일지가 허위 작성·보고했다고 봤다. 다만 6월 공판일은 대체 휴무를 신청, 복무 기록 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11일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A씨가 성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실을 1년 넘게 몰랐던 북구는 올해 2월 재임용(근로계약 연장)했다. 선고 재판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초에는 A씨가 신청한 사직을 받아들였고 퇴직금으로 1850만 원을 월세로 지급했다.

또 다른 선수 B씨 역시 임용 직후인 지난 2021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기소유에 처분 받았다. B씨는 이날 초까지도 자신의 성범죄 수사 이력을 허위 진술했고 감사 기간 중 들은 사직 신청을 했다. 사직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사흘 무단 결근까지 했다.

이처럼 선수단 9명 중 2명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파문이 일자, 북구는 43만 구민에 공개 사과하고, 뒤늦게 해당 선수들에 대한 해임 징계 등 쇄신책을 내놨다. 감독·코치에 대한 징계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이후 다시 논의·의결기로 했다.

그러나 감독 등은 일관되게 “두 선수의 성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지역 검도계와 구청 안팎에선 ‘감독과 코치가 정말 몰랐겠느냐’, ‘모 선수의 성범죄가 뒤늦게 알려진 데에는 뒷배경도 작용했다’ 등의 의혹도 나온다.

코치진이 공교롭게도 A씨의 재판 출석일마다 훈련 일지를 허위 작성한 만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남는다.

이에 대해 검도부 감독은 뉴시스의 통화에서 “두 선수의 성범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듭 밝혔다.

훈련 일지 허위 작성에 대해서는 “A씨가 4월 5일 오후 코치에게 ‘발목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보고하고 조기 퇴근했다. 착오로 기록

을 제대로 안 했을 뿐이다. 5월 대회 당시에도 ‘아픈 가족 진료에 동행했다가 따로 합류하겠다’고 하길래 출전으로 기록했었다. 단순 기재 누락이다”고 해명했다.

“이유 불분하고 선수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면서 “후후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으나 책임하는 동안 믿음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번 검도부 감사에서는 검도부 운영위원 구성이 현행 조례를 위반한 사실도 파악됐다.

북구는 현행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검도부 운영위원으로 시 검도회 소속 임원·관계자(지역 검도인)를 제외한 체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검도부가 종목 단체의 부당한 외압·개입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됐다. 그러나 시 검도회 임원이 재위촉, 개정 이후 4년 째가 되도록 현재도 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선수 책임용 평가 소홀 ▲대회 출전·훈련 결과 보고서 지연·누락 ▲선수 복무 위반·허위 진술 ▲담당 부서 형식적 지도·점검(2019년~2023년 8월까지 120차례 점검, 결과 보고는 8건) 등 부적정 운영 실태 14건이 적발됐다.

북구는 검도부 운영 관리 담당 국장, 전현직 과장 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전·현직 주무팀장과 담당공무원 등 5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연가 보상비·출전 여부 부적정 지급 사례 관련 비용 235만여 원은 환수기로 했다.

이슬비기자

## 내년도 건보료 얼마나 오를까...7년만에 동결 여부 관심

### 건보료를 결정 한 차례 미뤄져...이달 논의될 듯

정부가 조만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7년 만에 건보료가 동결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결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서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의 통화에서 “현재 건보료를 확정 시기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논의를 서두를 것”이라며 “건보료를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보료를 인상폭을 확정하기 위해 위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린 개정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의견차가 커 안건에서 빠졌다. 개정심 위원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정부 측 공익위원, 의약계 등 25명으로 이뤄지는데, 지난달 개정심 소위

에서는 동결 또는 1% 이내의 인상안 등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측에서 이례적으로 건보료를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가입자 대표도 동결 의견을 냈다. 다만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 이내 인상안을, 의약계에서는 1% 이내 인상안과 2%에 육박하는 인상안, 동결안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결안이 제시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23조87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있고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건보료를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료는 지난 2017년 한 차례 동결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했다. 내년에 건보료가 오르지 않으면 7년 만에 동결인 셈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로 올랐고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동결에 대해 부정적이다. 정기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약 1%의 건보료를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만에 하나 동결할 경우 적자가 뻔하다”면서 “그 전에 한 번 동결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 해에 당장 2%대로 올랐다. 대체 무엇을 위해 동결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12조원의 국고 지원으로 겨우(건보재정의) 수지가 맞는 상황이고 적립금 23조원이 있지만 이는 두 달치 지급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오유나기자